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297
----------	------

발의연월일 : 2020. 7. 22.

발 의 자 : 김도읍 · 권영세 · 윤한홍
추경호 · 박덕흠 · 김정재
정진석 · 조수진 · 구자근
김성원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성추행 사실을 상관에게 보고하고 조치를 요구하였지만 이를 묵살당하여 더욱 많은 피해를 가중시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음.

현행법은 신고의무를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로 제한하고 있음.

이에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2차 피해 방지 및 조속한 사건 해결을 위하여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근로자 등을 보호·감독하는 자에게 성폭력 사실 인지 시 수사기관과 성폭력피해상담소에 신고를 하도록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피해사실을 알린 것에 대해 불이익처분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성폭력 피해를 인지하여 신고한 자에게도 불이익처분을 금지하도록 함(안 제8조).

나. 업무·고용관계로 근로자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위계에 의한 성폭력 사실 인지 시 즉시 수사기관과 성폭력피해상담소에 신고하도록 의무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중 “피해자”를 “피해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피해자를 고용하고”를 “피해자 또는 제9조에 따른 신고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를 고용하고”로, “피해자를 해고하거나”를 “피해자등을 해고하거나”로 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근로자 등을 보호·감독하는 자는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의 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과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u>피해자</u> 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누구든지 <u>피해자</u> 를 <u>고용하고</u> 있는 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u>피해자</u> 를 <u>해고하거나</u>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8조(<u>피해자등</u> 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 <u>피해자</u> 또는 제9조에 따른 신고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 <u>피해자등</u> ”이라 한다)를 <u>고용하고</u> ----- ----- <u>피해자등</u> 을 <u>해고하거나</u> ----- -----.
제9조(신고의무) (생 략) <u><신 설></u>	제9조(신고의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u>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근로자 등을 보호·감독하는 자는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의 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과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에 신고하여야 한다.</u>